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연구*

- 북한 핵위협과 주변국 위협대비를 중심으로 -

김연준*

요 약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관계의 예속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ISR)를 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공통전력과 방어무기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으로 첨단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인프라 축'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 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부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국가적 비전,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모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Research on direction of future Korean military force establishment

-focus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neighboring countries' counter military threat operation-

Kim Yeon Jun*

ABSTRACT

South Korea should not be in subordinate pos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like the past. As the status of middle power. South Korea achieves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overcoming North Korea's nuclear and conventional threats, and builds military power in Northeast Asia as a 'balancer'. This can firstly be achieved by constructing "attack systems triad". 'attack systems triad' can be established through integrating the C4ISR as a common strategy for the purposes of preemptive deterrence and retaliatory deterrence against the danger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Second, denial deterrence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 "defense system triad" by combining common military power and defensive weapon system. Finally, development of independent advanced technological strategies can be achieved by building defense industry and comb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constructing "Infra triad". As for constructing and reinforcing the future of the ROK military, a unilateral principle and policy efforts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force construction models are needed. This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government's national vision to take on the role of mediator and a basis founded upon the consensus of the public.

Key words : North Korea's nuclear and conventional threats, Deterrence by Preemptive, Deterrence by Punishment, Attack System Triad, Deterrence by Denial, Defence System Triad, Infra Triad.

접수일(2014년 1월 20일), 수정일(1차: 2014년 1월 20일),
계재확정일(2014년 1월 21일)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 본 논문은 2013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
하여 연구 되었음.

1. 서론

한국은 지난 6·25전쟁 이후로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전력 기반 하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 도발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과 경제건설을 병행하여 왔다. 우리는 2014년 지난 4년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이어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북한은 핵무장에 따른 자신감을 토대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재래식 도발을 감행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더 이상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힘의 대전환’(power shift)이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이 지역질서의 주도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는 미국·중국과 중국·일본 간에 세력경쟁, 해양 분쟁, 북한문제 등 안보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미국은 중국의 강대국 위상 강화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추구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을 후원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동중국해 일대에 자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을 우리의 이어도를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재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아베정권 출범이후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미·일동맹의 토대 하에 중국과 대결을 본격화하면서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서기 위해 ‘힘의 사용’이라는 유혹 앞에서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함에도 지금까지 우리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억제하고 관리하는데 주안을 두어왔다. 이제 우리는 당면한 북한의 핵도발 위협을 현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과 군사력을 건설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중국의 적극적 세력팽창과, 일본의 국내정치적 우경화

와 군사적 정상국가화 추진 등은 동북아 평화유지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질서의 예속자가 아니라 중견국의 위상에 걸맞게 역내질서의 균형자로서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안보위협·당면한 북한의 재래전·핵도발 위협,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이어도 위협, 일본의 독도 위협, 중국·일본의 역사주권 침해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평화적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틀인 핵억제 이론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의 전략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한반도 안보에 시사점 도출하고,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은 북한과 주변국가의 제반 위협요인과 대응방안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한국군 군사력 건설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군사력 건설은 정부나 국방전문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토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문적인 핵 억제이론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비 가능한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며,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 모형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도하였다.

2. 핵 억제이론 검토

억제(deterrence)는 예전부터 존재해온 개념이지만 핵무기 출현으로 더욱 유효한 개념이 되었다.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전쟁에서 선제공격을 실시할 경우에 공자에게 승리의 가능성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의 재래식 전쟁도 각 무기체계의 파괴력·정밀성 증대, 사거리의 신장으로 인해 치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따라서 억제의 개념은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을 망라하여 타당한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2.1 억제의 개념과 조건

억제란 “적으로 하여금 현재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것이 초래할 비용과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10]. 이러한 억제에는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이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한다. 억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억제에의 성패는 정치·외교력을 동원해서 상대의 군사력 사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억제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되 가급적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억제가 말처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들 간의 미묘한 관계와 국제체제의 성격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은 억제에의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communication), 능력(capability), 그리고 신뢰성(credibility)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6]. 첫 번째로 ‘의사전달’이란 어떠한 범주의 행동은 해서 안 되고 만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적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의사전달에 있어서 억제자는 일관성을 가지고 피억제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은 물론, 피억제자는 의사전달 받은 내용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까지도 다루어야 한다. 두 번째로 ‘능력’이란 상대에게 압력이나 해를 가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억제자는 상대가 얻기를 원하는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억제자는 냉정하고 침착한 계산을 통해 특정 행동에 대한 손익을 비교하고 그 균형관계를 철저히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로 하여금 반항해도 소용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치러야 할 비용과 위협이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이란 상대방이 순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보복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치로서, 이러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억제는 성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반대로 행동을 위반하더라도 억제자가 즉각 보복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대국가가 인식한다면 억제는 실패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사전달, 즉 억제가 상대국가에 금지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상대국가에서 전달된 메시지의 왜곡가능성까지 배제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둘째로 능력의 과시, 즉 상대가 금지된 행동을 할 경우 이득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억제자는 억제자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신뢰성을 확신할 때 억제는 성공할 수 있다.

2.2 억제의 유형

20세기에 핵무기의 등장은 자체의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군사력을 파괴하지 않은 채 심대한 보복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로 적의 군사력에 대한 ‘거부’(적을 패배시켜 승리를 추구함) 또는 ‘승리’ 없이도 적에 대한 ‘응징’(적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함)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 핵시대의 억제는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지 않은 채 적에게 가공할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위협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10]. 따라서 핵시대에 억제는 ① ‘응징적 억제’, ② ‘거부적 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상대방에게 선택을 맡기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위협하는 것으로 상대가 파괴시킨 것보다 더욱 심각한 파괴를 가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다[12]. 응징적 억제는 상대방이 대규모 핵미사일로 먼저 공격할 경우(제1격) 이를 요격할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라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나, 상대방의 제1격으로부터 생존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를 준비하였다가 반격(제2격)하여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응징적 억제는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제2격 능력 즉 공격 능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징적 억제’는 제1격에 의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비이성적인 피억제자에 대하여 억제의 실효성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다. 즉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능력을 구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이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부적 억제’는 공격자(피억제자)의 목표 확보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주기위한 방법으로서, 공격자의 기도를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태세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11]. 그러나 ‘거부적 억제’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지와 능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불리함이 존재한다[1].

3. 한반도 전략 환경 전망과 분석

3.1 국제 안보정세 전망

1990년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형성된 탈냉전시대의 국제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국가 간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2008년 유럽발 재정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힘의 대전환(power shift)이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의 심화와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장기화 등 구조적인 쇠퇴화 현상이 뚜렷하고, 유럽은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하에 있으며, 일본은 장기 불황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이들 국가가 국제질서를 유지하거나 만들어갈 여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세계질서를 급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2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국가 지도부를 새로이 선출하였다.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신 리더십은 국제질서의 유통화 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면서 세계적인 안보나 보편적 가치보다는 국익(國益) 추구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

점증하고 있는 해상 영유권과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해양법 적용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해결과정에서 관련되는 국가 간에 합종연횡(合終聯橫)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분쟁, 국제테러, 재해·재난,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超國家的)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원활한 작동은 제한되고 있다.

3.2 아태지역 정세 전망

아태지역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군사·경제적 강대국 간에 이해가 교차하며, 한반도가 위치한 지역이다.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이 가속화 되고, 역내 국가 간에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국가들은 역내에서 주도적 지위와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국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20~

2030년경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공세적인 외교 전략에 걸맞게 역내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어전략¹⁾ - 반 접근(anti-access)/ 지역거부(area denial) 전략 - 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성요격무기, 제5세대 전투기(J-20), 항공모함, 탄도탄 발사 핵잠수함, 사이버무기 등 거의 모든 군사영역에서 첨단기술 수준의 전략무기들을 과시함으로써 반 접근(anti-access)/ 지역거부(area denial)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게 하였다. 한편, 중국은 해양영토분쟁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과 센카쿠 열도, 베트남과 시사군도에서 필리핀과는 난사군도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9].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면서 미국중심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정치·경제·전략적 차원에서 ‘아·태지역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표방하면서, 한국·일본·호주·필리핀·태국 등 5대 동맹국들과의 전통적인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아베정권 출범이후 강대국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보통국가로 전환을 표방하면서 러시아의 북방위협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가능한 동적방위력 개념에 입각하여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미·중간 경쟁구도에서 균형자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2008년부터 미래안보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²⁾ 러시아는 2009년 5월과 2010년 2월 중·장기 국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2020’과, ‘군사독트린’을 발표하였다.³⁾

- 1) 중국은 자국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평양지역에 3중 방어선을 구상하고 있다. 2000년 중반까지 제1도련선(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 방어, 2025년 까지 제2도련선(오가사와라-사이판-파푸아뉴기니) 방어, 그 이후 제3도련선(하와이를 연하는 선) 방어를 추진하고 있음.
- 2) 러시아는 ‘세계 강국 위상 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교·정치 등 발전 방향을 제시함.
- 3) 러시아의 NATO의 동진, 미국의 MD 구축과, WMD 확산 등을 위협으로 상정하였음. 이에 대비하여 해외파병 확대, 핵무기 보유로 핵전쟁 억제, 첨단 재래식 무기의 중강 등을 표방함.

미국과 중국 간에 군사전략이 상호 충돌할 경우에는 신 냉전 구도 등장이 예상된다. 비록 중국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국가와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대치로 인한 신 냉전 구도의 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국가 간에 해양 분쟁은 분쟁 당사국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질서 변화의 핵심적인 변수이다. 특히,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자신의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 하고 해군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 및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및 공세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해양 영토분쟁이 평화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영토분쟁이 무역보복 등 비 폭력적 갈등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사용한 국지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3.3 한반도 전략 환경 분석

3.3.1 북한의 군사적 위협면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金正은은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고, 2012년 4월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실질적인 3대세습 권력승계를 완료하였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이어서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스스로 핵을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으로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한 자신감으로 남북한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핵전력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군은 현역 119만여 명, 예비군 770만여 명으로 병력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질적인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비대칭적인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약 20만여 명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기부양전투함을 자체 개발하여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무기와 전자전 무기를 은밀히 발전

시키고 있으며, 북한군은 DDoS 공격능력과 GPS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7].

2013년 12월,金正은은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도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처형을 하고 이를 세계 언론에 공표하는 등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비이성적인 정권임을 만천하에 노정하였다. 이제金正은 정권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국지도발이나 사이버공격마저도 보다 도발적이고 폭력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역제가 실패하여 북한의 공격이 압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공을 허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 그들이 공격하기 이전에 한국군이 공격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3.3.2 지전략적(地戰略的) 측면

우리의 생존권인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개국이다. 역사적으로 이들 3개국이 역내 패권경쟁을 도모해 오는데 가운데 우리와의 전통적 역학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미래에도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편, 미국은 2차 대전의 종전 및 전후처리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한 이래 남북분단, 한국의 독립, 한국전쟁 참전,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과는 불가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국익의 확충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한반도는 전형적인 반도 국가로써 대륙국가(중국·러시아)와 해양국가(미국·일본)간의 세력이 교차(交叉)하는 동북아의 심장지역에 위치하여 3면이 바다로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성이 중국·일본·러시아·미국이 상호 각축하는 패권구도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현대에 이르러 육상에서 국경선은 어느 정도 확정된 반면에, 해상에서 국경선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세력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는 해양영토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와 인접한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베트남과 시사군도 및 필리핀과 난사군도 문제 등 해양영토 분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과는 역사 문제, 이어도 문제와 한반도국경선 문제, 일본과는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와 관련된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견국(middle power) 위상에 걸맞게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따른 현재적 위협은 물론 미래에 예상되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까지를 고려하여 우리의 국익(國益)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3.3.3 국력/ 군사력 규모면

한반도와 지전략적으로 인접한 주변 4개국은 국력면에서 우리에게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현재적(顯在的) 능력(能力)과 잠재력(潛在外)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 보유국으로서 우리의 약 28배,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기술 대국으로서 그 규모가 우리의 약 6배,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영토 보유국으로서 우리의 약 77배, 미국은 명실 공히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우리와의 비교가 무의미한 국가이다. 주변국이 보유한 군사능력을 살펴보다라도 일본의 보유병력은 약 25만여 명-중국(약 230만여 명), 미국(약 160만여 명), 러시아(약 95만여 명), 한국(약 64만여 명)-으로 우리에게 다소 뒤진다는 점을 제외하고, 첨단무기와 핵무장 혹은 전략적 선택권(일본)을 보유하고 있다[3]. 중국, 일본, 러시아는 우리에게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수준의 군사역량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능력이 모두가 세계적 수준의 현대군(現代軍) 내지 첨단기술군(尖端技術軍)의 수준인데다 핵·재래식의 각종 현대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국방비 규모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2010년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1조 6,300억 달러)의 53%나 되었다(표 3-1, 주변 4강의 2010 국방비 현황 참조). 표에서와 같이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전체의 약 43%인 6,936억 달러로서 중국의 9배, 러시아의 16.5배, 그리고 일본의 12.7배나 되었고, 이들 3국의 국방비 합보다 4배나 많았다.

<표 3-1> 주변 4강의 2010 국방비 현황

구 분	국방비 (억 달러)	GDP대비 비중(%)	병력(천명)
미 국	6,936	4.77	1,569
중 국	764	1.3	2,285
러시아	419	2.84	956
일 본	544	1.0	248
한 국	257	2.52	642

*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2012', 국방부, p. 288.

중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중국이 공표한 국방비는 무기구매, 연구개발, 방산지원 등 군사력 건설 투자부문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이를 추정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적지 않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2011년 '군사력균형'에 의하면, 2009년 국방비의 경우 중국의 공표치는 671억 달러인데, 투자비를 포함하면 983억 달러가 되고, 이를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1,666억 달러로 추정하였다[7]. 러시아의 국방비는 소련 붕괴 이후 20년이 경과한 오늘날 일본과 같은 규모로 축소되었고, 중국 국방비는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지금은 일본과 러시아의 군사비를 합한 규모 이상으로 증대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이 지역의 세력균형 판도를 예고하는 실질적 지표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나, 미국은 재정악화로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 달러를 축소하고자 한다. 일본 역시 GDP의 2배가 넘는 국가부채로 인해 국방비를 증가시킬 여력이 크지 않다.

2013년, 우리는 3년 연속 1조 달러의 무역수지를 달성하면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위상을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4강은 경제적·군사적으로 강대국으로 그들과 상응하는 국방비를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에, 우리는 주변국들의 현재적·잠재적 위협에 대비 가능한 비대칭전력을 포함한 적정 군사력을 구비해야 한다.

3.3.4 전쟁양상면

현대 무기체계는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각 무기체계의 파괴력과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현대 재래전은 제한전, 국지전, 단기전의 국지분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인 제한전(limited war)의 성격이다. 현대 재래전은 전면전으로 확대를 방지하면서, 차후 정치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상대로부터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국지분쟁의 양상으로 표출된다. 두 번째로 국지전(local war)의 성격이다. 국지분쟁은 작전의 범위가 협소하다. 이로 인하여 많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분쟁당시에 투입되는 전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투입되는 전력은 최첨단 전력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전(短期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지분쟁은 순간적인 주도권과 우세 유지가 중요하

다. 만약 국지분쟁이 장기전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원래의 목적달성이 지연되고 예측하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지분쟁이 제한전·국지전·단기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관계에 의한 군사력 지원은 제한된다. 양국 간 동맹의 효과는 분쟁발생 이전에는 억제효과는 있으나, 분쟁발생 당시에 동맹의 지원여부는 정치적 문제, 단기전임을 고려할 때 적시적인 군사력 투입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의 전쟁수행 방법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무기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분쟁양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정밀감시수단으로 상대방의 전략적·작전적 중심을 식별하고, 원거리 정밀타격수단을 활용하여 분쟁지역 밖에서 원거리·비접적 타격을 실시한 후, 분쟁지역에서 근접·접적 교전하는 형식으로 교전방식이 진화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및 가상 적국에 대하여 근접·접적 전투에서 대하여 ‘자위 충분성’을 보장받으며, 원거리·비접적 타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복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비해야 한다.

3.3.5 한반도 안보에 시사점

국제 및 아태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는 신냉전구도의 출현가능성을 증대시키며, 한국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국력 신장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인 중견국이며, 우리는 주변국가와 긴밀한 협력과 함께 다양한 위협요인을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에,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현재적 위협과 주변 4개국과 국지분쟁 가능성에 따른 잠재적 위협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지역질서의 주도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력신장에 합당한 중견국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인 협상의 선택권을 갖고 이들 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효과적인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여 안보현안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협력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이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역내 국가의 첨단 군사력 강화와 군비경쟁에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 여건에 적

합한 독자적인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일국(一國)의 군사력 건설은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므로, 우리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까지도 고려한 미래 군사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로드맵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구비해야 한다.

4.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

주권국가에서 국가이익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위협(威脅)과 대응(對應)’이라는 평범한 논리를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군사력 건설 소요를 산정할 수 있다.

4.1 ‘군사력 건설 소요’ 결정시 고려사항

군사력 소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현재적·잠재적 위협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법을 구상하고, 이에 부합된 무기체계의 종류와 수준 등을 결정한다. 우리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4강과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와 국내적으로 소요에 산 확보와 운영에 따른 ‘국방 딜레마’(defense dilemma)를 극복해야 한다[8].

미래 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 현재·잠재적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협요인에 대하여 중견국 위상에 부합된 군사적 대응개념(전략, 작전술, 전술)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평시에 전쟁과 국지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전쟁과 국지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4.2 북한 도발위협에 대응방안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재래식 도발 위주로 대비하였으나,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유형은 ① 국지도발, ② 전면전 도발과 ③ 핵위협 도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4]. 첫 번째로 북한의 국지도발은 전

면진으로 확대를 억제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해상에서 어뢰 또는 대함미사일을 사용하여 아군의 해군 함정을 공격, ㉡ 지상에서 경기북부 지역 등 민간인 거주 지역을 미사일 혹은 장사정포로 공격, ㉢ 서해5도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지역을 점령하여 정치적 협상 시도, ㉣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 국가 주요시설(인천공항, 국가통신망 등)을 타격과 ㉤ 기타 전방 GP 공격, 전단 살포, 화생무기 공격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응징과 보복을 전제로 하는 ‘응징적 억제’전략을 통하여 현재와 예상되는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대북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명백한 상황에서 선공(先攻)을 허용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적 억제’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이 국지도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북한은 핵전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군은 현재 현역 119만여 명, 예비군 770만여 명 등 압도적인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전진 배치하였고, 기갑·기계화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함으로써 기동력과 타격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 무력적화 통일 전략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한 우리의 군사전략은 ‘방어적 공세’전략을 통하여 개진후 최단 기간 내에 공세전환을 통하여 반격을 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의 ‘방어적 공세’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군사력은 평시 국지도발에 대비하였던 응징과 보복, 거부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위협으로는 ㉠ 전철 초기에 전술핵 사용을 위협, ㉡ 핵무기 및 미사일 발사 준비 위협, ㉢ 핵무기 및 미사일 비행 위협과 ㉣ 핵무기 및 미사일 폭발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개진초 전술핵 위협에 대하여는 한미 연합전력의 전술핵으로 대응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발사 준비 위협에는 핵무기에 대한 응징적 억제의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고 거부적 방어력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제한된 여건 하에서 ‘선제적 억제’전략으로 대응하며, 핵무기 및 미사일 비행위협에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폭발에 대해서는 한미연합 전략에 의한 핵보복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의 다양한 도발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응징적 억제’(공격적 억제전략 활용)와 ‘거부적 억제’(방어적 억제전략 활용)로 대응해야 하며 국력신장에 걸맞게 ‘자주적 억제’방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4.3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응방안

중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하고 아시아가 아태지역과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발전되면, 한국은 역내에서 지리적으로 중앙지역에 위치하여 자칫하면 미국·중국 간 중국·일본 간 패권적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4.3.1 주변국 잠재적 위협 식별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은 주변 4강이 경쟁하거나 충돌하는 경우(제 1유형), 주변 1국이 한국과 충돌하는 경우(제 2유형) 등 두 가지 양상을 고려할 수 있다.

<표 4-1> 주변국과 잠재적 위협 양상

구 분	잠재적 위협 양상	
제 1유형 (주변 4강 경쟁)	제1-㉠유형	미국-중국 충돌
	제1-㉡유형	중국-일본 충돌
제 2유형 (주변 1국-한국 경쟁)	제2-㉠유형	중국-한국 충돌
	제2-㉡유형	일본-한국 충돌

<표 4-1>에서와 같이, 제 1유형의 경우는 한반도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간에 패권 경쟁이 심화되어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한국은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경우(제1-㉠ 유형)와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경우(제1-㉡ 유형)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이 한반도에 미치는 위협의 성격은 간접적이나 위협의 강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유형의 경우는 주변 1국과 한국 간에 직접적인 이해충돌로 인하여 한국에 안보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한국 간에는 이어도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EZ)

· 서해상 어로 문제, 역사인식 · 동북공정 문제, 한만 국경선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지적인 갈등으로 충돌하는 경우(제2-㉔ 유형), 일본-한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역사왜곡 문제, 동해표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인 갈등으로 충돌하는 경우(제2-㉕ 유형)를 예상할 수 있다. 제2유형의 경우 한반도에 미치는 위협의 성격은 직접적이나 위협의 강도는 제1유형의 경우에 비하여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잠재적 위협은 주변 4강 상호간에 이익이 상충할 때 발생가능하고, 이에 한국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하에서 역내에 전면전 발생을 억제하되, 우리와 일본 또는 중국 간에 강압외교나 혹은 국지분쟁 발생에 대한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

4.3.2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응방안

제 1유형의 경우에는 주변 4강의 패권경쟁 구도 하에서 우리는 역내에서 ‘균형자’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제 2유형의 경우에는 주변 1국과 한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 수준의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우리의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력은 아래와 같은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변 4강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1국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 1국과 연합함으로써 함부로 무력공격을 할 수 없는 작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군사력은 주변 1국의 1/3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자위(自衛)적 방위가 가능하고[5], 주변 4강 개별국과 합종연횡(合從連衡)을 통하여 관계국가와 무력분쟁을 자제시키는 ‘균형자’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주변 1국과 한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단기전양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에 의한 군사력 지원 없이도) 한국군 단독으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응징적 억제’가 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예상되는 국지분쟁에 대비가능한 군사력 건설 소요를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주변 1국에 결코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 1국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응징적 억

제’와 ‘거부적 억제’가 가능한 적지만 강력한 군사력 수준을 구비해야 한다.(자주적 국방력 확보) 두 번째로 주변 1국과 동맹 혹은 연합을 할 경우, 역내국가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비해야 한다.(균형자 역할) 세 번째로 주변 1국과 예상되는 국지 분쟁 - 독도 · 이어도 소유(영유)권,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등- 시 초기단계에 한미연합전력의 지원 없이 상대의 목적 달성을 거부할 수 있는 ‘응징적 거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1국과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주변 1국(미국)과 동맹하거나 연합하여 자위(自衛)와 자존(自存)을 달성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4.4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 모형

북한의 도발위협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의 구비조건은 한미동맹의 공고한 기초 하에서 ‘자주 국방력’ 확보, ‘균형자 역할’과, 역내 도서 영유권, 국경 문제 등 ‘국지분쟁에 대한 독자적 거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주변 4강은 정치 · 군사 · 경제적으로 강대국이며 우리가 주변 4강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군사력을 준비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군은 현대전의 수행방법인 비선형전(non-linear warfare) - ‘분쟁지역 외부에서 원거리 · 비접적 타격 후, 분쟁지역 내부에서 근접 · 접적 전투’ -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위 충분성’과 ‘응징적 억제’가 가능한 비대칭적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과 주변국가의 핵과 첨단 전력에 대한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지원받으면서, 역내 분쟁발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현대전의 수행방식인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에 기반을 두고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센서격자망(원거리 정밀감시 체계), 정보격자망(지휘통제체계), 그리고 교전 격자망(공격 · 방어무기 체계)으로 구성되며[2], 전장의 개별 플랫폼들을 모두 네트워크로 상호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각개별 플랫폼은 원거리에 위치한 다른 플랫폼들이 제공한 정보도 자동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을 추적 및 식별하고 교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면서 교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한국의 군사력은 원거리 정밀감시 체계, 자동화된 지휘통제체계를 공통기반으로 하며, 육군·해군·공군 전력의 공격·방어무기 체계를 통합하여 (합동) 공격체계 축, (합동) 방어체계 축, 그리고 인프라 축으로 시스템화하여 건설함으로써 다양한 위협에 역제를 보장할 수 있다.

<표 4-2>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 모형

구 분	구 성 체 계	비 고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정찰체계 ○ 지휘통제체계 	
공격체계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거리 정밀 타격체계 ○ 사이버 공격체계 	‘선제적 억제’, ‘응징적 억제’ 보장
방어체계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사이버/화생방 방호체계 	‘거부적 억제’ 보장
인프라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역량 ○ 방위산업 	자주적 전력 창출

<표 4-2>와 같이, 첫 번째로 ‘공격체계 축’에서는 공통체계인 원거리 정밀 감시체계와 네트워크 복합체계와 연동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원거리 정밀 타격체계와 사이버 공격체계를 통합하여 소요 군사력을 건설함으로써 ‘응징적 억제’와 ‘선제적 억제’에 필수적인 보복과 응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로 ‘방어체계 축’에서는 공통체계와 연계하여 한국형 합동 미사일 방어체계와 사이버 및 화생방 방호체계를 통합하여 군사력을 건설하여 ‘거부적 억제’력을 구비하여 우리의 자위와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축’은 응징적·선제적·거부적 억제 전력의 연구개발 역량과 방위산업으로 구성하여 현대전에 부합된 첨단전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자주적 억제 역량을 지속하여 발전시키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3개축을 기반으로 육군·해군·공군이 통합된 군사력 건설모형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강력한 군사적 신념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

5. 결 론

최근 아태지역은 미국·중국 간에 세력경쟁, 해양 분쟁, 북핵문제 등으로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반도 지역은 군사적 대치와 남북교류 가능성 등 이중 구도가 형성되어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더하여 주변국과 국지 분쟁의 발생 가능성 등 잠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극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한중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모택동 군대는 중국을 건설하였고, 이스라엘은 주변의 거대한 아랍세력들과 대치하면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우리는 압도적인 국력을 보유한 주변 4개국과 인접해 있지만, 중견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전략과 이에 부합된 군사력 건설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하고, 역내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선제적 억제’,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선제적 억제’력을 완비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력을 기반으로 보다 도발적인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으로 한미연합전력의 기반 하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적 억제’전략 수행개념과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즉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해 어떤 전력 공격을 할 것인가?, 선제타격목표까지 어떻게 기동할 것인가?, 표적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무완수 후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필수적인 군사력을 구비해야 한다. 선제타격 전력은 단기적으로는 한미연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주적 역량발휘가 가능하도록 군사력 건설의 범위와 수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선제적 억제’에 소요되는 전력은 현재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응징적 억제’를 위한 육군·해군·공군전력이 통합된 합동 공격체계 전력 건설계획과 연동하여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거부적 억제’력은 앞에서 설명한 ‘응징적 억제’력과 함께 자주 국방력과 역내에서 균형자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 핵과 재래전 위협에 대비한 ‘거부적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동 방어무기체계를 구비함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자존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강국들은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을 통해 현대전에서 군사력의 비대칭적 우위성(asymmetric priority)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도 민·군 겸용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기술적 여건 구축을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을 통합하여 ‘인프라 축’을 구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과 전력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위상에 부합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 1국과 ‘독자적 국지분쟁 억제 역량’(자주 국방력 기반 + 균형자 역할 수행)과 ‘한미동맹하 전면전 억제 역량’에 필요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군사력 증강에는 국방예산의 추가적인 반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점에서 국방예산의 증액은 쉽지 않은 여건이다. 국가경영에 있어 안보와 복지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안보분야에 예산증액은 국민적 합의와 정치·외교적 결단이 필요한 쉽지 않은 사안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정부, 국민과, 군대의 노력과 의지가 삼위일체(trinity) 되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갈파하였다[13]. 이에 우리는 현재와 잠재적 위협에 따른 국지분쟁과 전쟁발생을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위협까지를 고려한 미래 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통일 한국의 역내 균형자 역할까지를 고려한 정부차원의 국가안보비전 확고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시한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 모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노력과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3호, pp. 154, 2013.
 [2] 권태영,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범문사, 2008, p.175-176.

[3] 국방부, ‘국방백서 2012’, 국방부, 2012, P. 24-26, p.288.
 [4] 박창희,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2013, p.358, p.611-612.
 [5]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 연구’, 육군교육사령부, 1987, p.428.
 [6] 필 윌리엄스, 최병갑 역, ‘현대 군사전략대강 II: 전략의 제원리’, 국방대학원, 2006, p.56-61.
 [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13’, 다와디자인, 2013, p.27-28.
 [8] 황진환 등, ‘군사학 개론’, 양서각, 2011, p.104-105.
 [9] 주간동아, 2013. 1. 14.
 [10] Alexander L. George & Richard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11, p.21.
 [11] Gle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Univ. Press, 1961, p.14-16.
 [12]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Cambridge Polity Press, 2004, p.26.
 [13] Michael Howard & Peter Paret ed & tr., ‘Carl von Clausewitz, On War’, Princeton Univ Press, 1984, p.89.

[저 자 소 개]



김연준 (Kim-Yeon Jun)

1983년 3월 문학사
 1996년 11월 국방관리전공 석사
 2012년 8월 경호학 박사
 현재,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kyj23509@naver.com